

# “고용보장 없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안돼”

## 1노조 광주시의회 기자회견 “정치권 입장 밝혀라”

### 해외매각 저지 대책위원회, 민주당 광주시당 점거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회사 해외매각 추진과 관련해 정치권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1노조와 비정규직지회 집행부 등 20여 명은 18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금호타이어 매각은 일자리, 지역경제, 국익의 관점에서 충분한 정보공개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매각주체인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크아웃 5년간 고통 전담으로 피담 흘려 회사를 정상화해줬더니 박삼구 회장은 무능 경영으로 부채 3조, 금융이자 연 2000억원 이상의 경영위기 상황을 만들었다”며 “산업은행은 회사를 정상화해 놓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상식조차 간과한 채 법정관리를 운운하며 중국업체인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추진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했고 광주시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고용보장, 국내설비투자, 먹튀 방지 제도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에서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지회 1노조 다른 계파인 민주노동자회(민노회) 현장노동자들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저지 대책위원회(준)’ 위원 20여 명은 이날 광주 서구 화정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을 점거하고 정부와 여당에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이들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문회에서 ‘금호타이어 매각을 채권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했던 약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 표명과 민주당 추미에 대표 면담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이 매각 중단을 당론으로 채택할 때까지 농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호타이어가 세계 35위 업체인 더블스타에 넘어가면 30년 넘게 축적한 874개 독자기술과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

타이어 등 글로벌 특허권 50여 건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금호타이어지회 1노조 등은 기자회견 뒤 윤정현 광주시장을 만나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고용 보장과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 설비투자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시면 1만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에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고용 유지와 시설투자 확대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저지 대책위원회(준)가 18일 광주 서구 농성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매각 중단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정상적 방법 상표권 사용계약 체결하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 요구

### 채권단 수용 어려워 난항 예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최종 제안을 수용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채권단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에서 상표권 사용협상이 또다시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채권단이 제안한 상표권의 사용안을 받아들여기로 결의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은 특정 기간 보상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사회 결의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사실상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한 것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더블스타가 계약 조건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데, 더블스타는 계약 조건 변경이 어렵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주식매매계약(SPA)상의 매각 선결요건인 상표권 사용조건을 바꾸면 채권단이 더블스타가 추가 부담하는 사용료만큼 대출 이자를 깎아주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금호측은) 이 경우 사실상의 매각가격 인하로 규정해 우선매수청구권 부활의 논거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7일 금호산업이 더블스타와 매각 선결요건 상 계약 조건인

‘0.2%, 5년+15년 사용’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실질적으로 ‘0.5%, 12년+6개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액 847억원(현재까지 할인율 5% 적용)을 일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르면 24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금호산업의 수정 제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정리하고 후속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약정상의 매각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경쟁진 해임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마무리된 채권단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채권단의 경영진 교체 조건은 충족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상표권 관련 마지막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인수를 통해 옛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을 노리는 박삼구 회장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중국 더블스타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컨소시엄을 구성,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했으나 상황이 여의지 않자 채권단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상표권 문제로 매각 협상이 지연될 경우 현행법상 주식매매계약(SPA)의 6개월(9월 23일까지) 효력이 만료되면서 더블스타와 체결한 금호타이어 매각계약은 무산되고 박 회장이 인수 매수권이 넘어오게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

## 전남도 ‘요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 1200억원 들여 10만㎡ 규모

### 목포·신안 등 후보지 거론

조선업 경기 침체로 10년 가까이 중단됐던 전남 ‘요트시티’ 조성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전남도는 18일 도청에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요트시티 추진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사업비 1200억원을 들여 10만㎡ 규모의 부지에 생산과 판매, 숙박, 레저 시설을 갖춘 요트 산업 중심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개발, 생산, 판매, 관광이 복합된 세계적인 종합 요트시티 조성 ▲생산형 마리나 및 비즈니스 마리나 구축 ▲레저선박업체 및 기자재업체에 대한 구조개선, 인종·기술지원 단지 조성 ▲외국인 임대단지 조성 통한 외국 유명요트 업체 현지공장 유치 등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신안 압해도에

서 추진됐다가 무산됐다. 당시 특수목적법인(SPC)이 출범하고 18개 업체와 투자협약까지 이뤄졌으나 조선업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 마련에 실패하면서 사업은 흐지부지됐다.

전남도는 요트 인구나 해양레저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해양산업 육성 차원에서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양레저산업은 관광과 스포츠, 제조업이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기술과급 효과가 크고 엔진과 추진장치 등 전후방산업 파급효과도 높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서 전남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리조선 특화산업 조성’ 공약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포함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로는 목포, 신안 등이 거론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금호타이어 노조 내부 해외매각 둘러싸고 ‘입장차’

### 1노조 “안전장치 마련없는 부실매각 반대”

### 민노회 “기술·특허권 넘어가... 매국행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놓고 금호타이어 노조 내부에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18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1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1노조 내 다른 계파인 민주노동자회(이하 민노회) 기자회견에서 각각 확인된다.

1노조는 ‘안전장치 마련 없는 부실 매각 반대’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민노회는 ‘해외 매각’을 매국적 적폐행위로 간주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1노조 허용대 지회장은 “노조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열고 다른 주장을 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고용보장이라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보장을 담보하는 매각 방식에 대해 양측 입장 차이는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경영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인 1노조는 고용보장에 대한 중국 더블스타 측의 뚜렷한 대안제시가 나올 경우 매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난

의 행군’보다는 고용보장, 국내공장 설비투자, 먹튀 방지 등 5개 요구안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안정적인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1노조는 그룹과 금호타이어의 부채가 많다는 점에서 원주인인 박삼구 회장이 다시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가져갈 경우 회사가 자체 회생이 어려운 상황을 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안전장치가 담보된 조건부 해외 매각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해외 매각’ 자체에 반대, ‘해외 매각 중단’을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추미에 대표 면담 등을 요구하며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농성에 돌입한 민노회는 ‘건실한 국내 기업 인수’를 통한 고용 보장을 희망하고 있다.

민노회가 결성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저지 대책위원회’ 김승철 위원장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넘어갈 경우 874개의 독자 기술과 50여개의 특허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해외매각은 매국적 적폐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대책위가 해외 매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납품 차질, 국내(광주·곡성·평택)공장 축소 또는 폐쇄, 기술 먹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채권단이 해외 매각을 중단하고, 경영정상화 후 국내의 건실한 기업에 재인수되거나 지역공동체가 함께 경영에 참여하는 ‘금호타이어 노사공동 경영이사회’를 구성해 문제를 푸는 것만이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고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만원 **4만7천원부터**

농업 업무자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사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해가온빌딩 1층)